

# 2017년 관세청 업무계획

2017. 1.

## 목 차

I. 기관 현황 .....	1
II. 2016년 주요 정책성과 및 평가 .....	4
III. 2017년 정책추진 여건 및 방향 .....	9
IV.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13
1. 보호무역의 파고에 대응한 수출기업 총력지원	
2.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관세행정 지원 강화	
3. 입출국자 1억명 시대에 대비한 여행자 통관체제 혁신	
4. 안정적 세수확보를 통한 국가재정 뒷받침	
5. 마약 · 불량식품 · 테러물자 차단으로 국민안전 보호	
6. 불법무역 · 무역금융범죄 근절을 통한 대외경제질서 확립	
7. 우호적 통상환경 조성을 위한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8. 미래 관세행정 성장 기반 공고화	

## I. 기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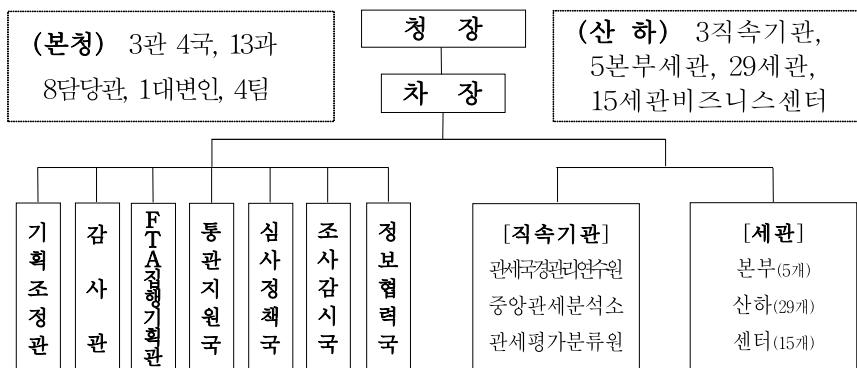
**1 개정** : 1970. 8월,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발족

2 주요 기능

- ① 수출입 통관 및 물류 촉진      ② 국가재정수입 확보  
③ 대외경제질서 확립      ④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보호

- (통관지원국) 수출입 · 여행자 통관, 보세제도 운영, 무역통계
  - (심사정책국) 관세 · 부가세 등 징수, 체납관리, 관세탈루 조사
  - (조사감시국) 불법무역 · 무역금융범죄 단속, 관세국경 감시감독
  - (정보협력국) 관세행정 정보화 기획 · 운영, 국제기구 · 세관협력
  - (FTA집행기획관) FTA 집행 및 활용지원, 수출입 원산지검증

3 조 직



본부세관(5)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
세관(29)	김포공항, 인천공항국제우편, 수원, 안산, 안양, 천안, 청주, 성남, 파주, 김해공항, 북부산, 양산, 창원, 마산, 경남남부, 경남서부, 울산, 구미, 포항, 속초, 동해, 광양, 목포, 대전, 여수, 군산, 제주, 전주, 평택(직할)
세관비즈니스센터 (15)	부평, 구로, 충주, 의정부, 도라산, 부산국제우편, 진해, 통영, 사천, 온산, 고성, 원주, 완도, 대산, 익산

#### 4 정 원

('16.12.31 기준)					
구 분	계	본청	본부세관	세관	직속기관
계	4,534	354	2,734	1,297	149
5급 이상	376	118	144	95	19
6급 이하	4,158	236	2,590	1,202	130



## II. 2016년 주요 정책성과 및 평가

#### 5 2017년 세출예산 : 5,129억 원\*

인 건 비	기본경비	사업비
3,039억 원 (59.3%)	300억 원 (5.8%)	1,789억 (34.9%)

\* '16 세출예산 5,010억원 대비 2.4% 증가

#### 6 2017년 징세목표 : 50.2조원 (總 국세 242.3조원 중 20.7%)

관 세	수입부가세	기타 내국세*
9.0조원 (17.9%)	34.2조원 (68.2%)	7.0조원 (13.9%)

\*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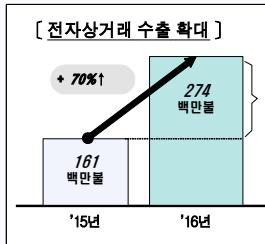
# 1 2016년 주요 정책성과

## 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16.9) 시행,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16.8) 도입, 전자상거래 증가에 대응한 「국제우편물 수출절차 간소화」 등 수출 확대에 총력 지원

\* 5대 전략, 22대 과제(보세공장제도 전면개편, 통관절차 간소화 등)

\*\* 우편물 접수 및 수출적재이행: 우체국 방문 ⇨ 방문없이 원스톱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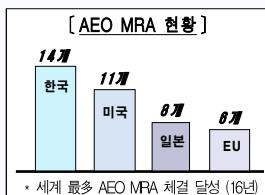
- 세관 비즈니스센터(15개) 신설, FTA 차이나센터(29개), 85명 ⇨ 34개, 118명 확대 등 FTA무역 지원체계 전방위 개선\*으로 FTA 활용\*\* 극대화

\* 원산지 간편 인정제 확대(농산물 ⇨ 축·수산물 85개), 한·중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 등

\*\* 활용 중소기업: 19,945개('15) ⇨ 30,657개('16) // 활용률: 65%'('15) ⇨ 66%'('16)

- 통관장벽이 높고 교역량이 급증하는 신흥국 중심으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AEO MRA) 확대\* 및既체결 협정의 이행관리\*\* 강화

\* 태국('16.12), \*\* 미국 등 5개국과의 MRA 이행점검



## ② 국제테러 예방을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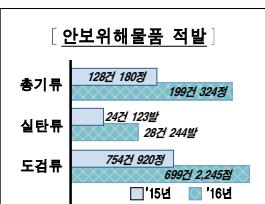
- 「對테러 국경감시 상황실」을 구축하고 세관별 테러대응 전담팀(34개 194명)을 운영하는 등 테러 예방 국경감시 체계 완비

- 총기·실탄·도검류 등 안보위해 물품 및 여행자에 대한 세관통제를 강화하고 국내외對테러 협업 네트워크\* 확대

\* 국정원과의 테러 정보의 공유(CTI-Net), 대테러 합동 훈련(10회)·검색 체계 구축 및 WCO와의 소형 火器 차단 합동 훈련(7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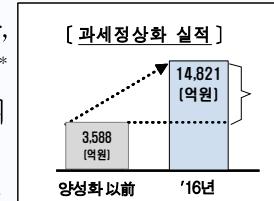
- X-ray 검색기(41)·금속 탐지기(21) 등 과학검색장비 확충 및 국경통과 화물·사람에 대한 일제·정밀 검사 강화\*로 테러 발생 차단

\* 일제검사: 2,871편 / 일 평균: 5.5편('15) ⇨ 7.9편('16)



## ③ 관세 정상화를 통한 국가재정 뒷받침

- 다국적기업 등 조세회피 高위험분야 중점 단속, 은닉재산 125 추적팀 운영 등 관세인프라 확충\*으로 세수목표(49.4조원) 및 공약가계부상의 지하경제 억제 목표(1.17조원) 성공적 달성  
\* 對기업 프로파일 체계화(5월), ERP-PASS(세원 정보 분석툴) 고도화 등



- 관세처분前 짐중심의제 도입, 내외부 법률전문가 참여 등 '관세조사 처분심의위원회' 개선을 통해 관세품질\* 지속 제고

\* 불복인용률: 34.4%'('15) ⇨ 29.5%'('16), 불복제기(비율/건): 1.7%/542건('15) ⇨ 1.5%/365건('16)

## ④ 중소·중견기업 지원강화 및 일자리 창출

-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 시행('16.7), 납기연장 등의 세제혜택 확대(중소기업 ⇨ 사업재편 추진 중견기업), 관세조사 유예제 등으로 稅부담 완화

\* 수입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신고 시점 까지 징수 유예

[세정지원 실적]	
지원 내용	지원실적
납기연장·분할납부	236억원
환급지원	3,958억원
부가세 납부유예	326억원
관세조사 유예	1,556社

- 중소·중견기업의 성실무역업체(AEO) 공인 확대\*를 위해 공인 기준 간소화·자금지원 적극 추진

\* 중소·중견 성실무역업체 공인: 170개('13) ⇨ 201개('14) ⇨ 263개('15) ⇨ 319개('16)

- FTA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Job-Matching\*\*으로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고,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FTA 컨설팅 제공

\* FTA 전문인력 8,975명 양성, \*\* 취업박람회 10회 개최 등 200명 고용 매칭

## ⑤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무역·외환범죄 근절

- 국민생활 밀접 4대 밀수척결 품목\*에 대한 전담팀 운영 등 대외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불공정·비정상 무역행위 엄단

\* 단속실적: 담배(140억원), 농수축산물(1,936억원), 의약품·의료기(2,201억원), 생활안전용품(856억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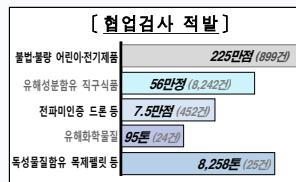
- 블랙머니 수사전담팀(14개팀) 운영, 민관 협업 「무역금융사기 예방·적발 체계\*」 구축 등 국제 외환범죄에 효과적 대응

\* 불법외환거래 적발: 4.1조원 // 예방 효과: 연간 4,410억원 금융사기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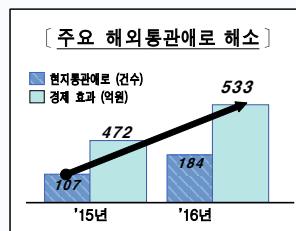
## ⑥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불량·유해 물품 차단

- 법정부 「수출입물품 안전관리협의회\*」를 신설('16.4)하고 통관(합동검사) · 유통(단속정보 공유) 등 전단계에서 「유해물품 차단망」 구축
  - \* 협의회 구성: 식약처, 환경부, 안행부 등 8개 부처
- 안전 미인증 · 원산지 둔갑\* 등 국민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유통물품에 대한 시기별·테마별 특별단속
  - \* 원산지 위반(억원): (먹거리) 24('15) ⇨ 130('16), (안전용품) 18 ⇨ 125, (건설자재) 2,145 ⇨ 3,103
- 유통이력관리 · 중점감시식품\* 확대, 세관검사율 상향, 유해식품판별 시스템 마련 등 단속기반 확충으로 수입 먹거리 안전성 강화 및 국민불안 해소
  - \* 유통이력관리 대상: 27개 품목('15) ⇨ 38개 품목('16)  
중점감시대상 식품: 127개 품목('15) ⇨ 150개 품목('16)
- 마약류 밀반입 경로 다변화에 대응한 테마별 특별단속으로 여행자 휴대품 등 新밀수루트를 통한 마약류 국경반입 차단\*
  - \* 여행자: 14.3kg('15) ⇨ 27.1kg('16, 89%↑), 특송: 6.0kg('15) ⇨ 6.3kg('16, 5%↑)



## ⑦ 국의 제고를 위한 글로벌 세관협력 확대

- 우리기업의 현지진출 · 통관분쟁이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청장회의 · 해외통관환경 설명회를 집중\*하고, FTA 차이나 협력관 파견(천진·대련) 하는 등 해외현지 국경통관 과정의 애로 해소
  - \* 관세청장회의(19회), 해외통관환경설명회(북경, 하노이 등 7회)
- 글로벌 인재의 국제무대 진출\*로 WTO·WCO 등 주요 국제기구 영향력을 확대하고, 개도국 세관직원 초청 연수\*\* 등으로 관세행정 친한파 육성을 통해 우리기업에 유리한 현지 통관환경 구축
  - \* 개청 최초로 세계관세기구(WCO) 의장(HS위원회, 정보관리소위원회) 선출, WCO인증교관 10명 배출
  - \*\* 정책결정권을 가진 개도국 세관 고위급·관리자 연수 확대 : 80명('15) ⇨ 127명('16, 59%↑)



## ⑧ 관세행정의 지속적 혁신 추진

- 인력부족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수출입통관 · FTA수출지원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관 조직 · 인력 대규모 재편\*(‘16.1)
  - \* 47개 세관을 34개 세관으로 통폐합하고 절감인력(170명)을 FTA 지원기능 등에 재배치
-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개통('16.4),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개소('16.7) 등 대규모 예산 투입 국책사업의 성공적 완수
  - \* 수출입업체 등 26만여개와 공공기관 169개가 연계된 국가 수출입물류 · 통관 업무처리망
  - \*\* 처리량: 3천건 ⇨ 3만건 / 처리시간: 5시간 ⇨ 3시간 50분(과학검색장비 집중배치로 불법차단 효율화)
- 연수원의 책임운영기관\* 전환('16.3), 업무분야별 通인재(전문가 그룹)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을 통한 혁신 · 성장 기반 강화 노력
  - \* 연수원장을 민간 교육전문가로 선임하고 인사·예산 자율성을 토대로 민간의 우수한 교육방식 등 적극 도입

## 2 평가

- ◆ 全세계적인 교역 부진에 대응하여 수출 활성화 · 중소기업 지원 등 정부시책 및 국정과제 뒷받침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

- 국제공항협회(ACI) 국제공항 세관 만족도 평가 10년 연속 세계 1위('16.4월)
-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정상화·정부3.0 우수기관 선정('16.2월)
-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16.11월)
-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16.12월)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16.11월)

- ◆ 汎정부적 수출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되고 국민들의 정부정책 체감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 국민이 정책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수단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할 필요

### III. 2017년 정책추진 여건 및 방향

#### 1. 정책추진 여건

#### 2. 정책추진 방향

#### 1 정책추진 여건

##### ① [교역환경] 보호무역 등 불확실성 속에 완만한 회복세 기대

- (세계무역) 세계경제 및 신흥국의 성장세 소폭 회복이 예상되나 중국경제의 둔화 리스크는 교역 개선의 부담 요인

<세계경제 성장을 전망 (OECD, %)>

	세계	미국	유로	중국	브라질	러시아
'15	3.1	2.6	1.5	6.9	△3.9	△3.7
'16	2.9	1.5	1.7	6.7	△3.4	△0.8
'17	3.3	2.3	1.6	6.4	0.0	0.8

<우리나라 수출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보호무역 주의 확산) 미국의 TPP 철회, FTA 재협상의지 등 무역질서 재편 가능성으로 세계 교역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 IMF-WB 연차총회시 각국 경제수장은 美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을 세계경제 리스크로 지목('16.10)

- 특히, 덤핑관세를 포함한 무역제재와 자의적 통관기준 적용 등 비관세장벽을 통한 자국 산업보호 강화\* 움직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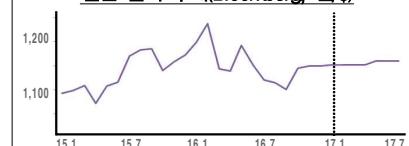
\* 무역제재(건, WTO): ('11) 119 → ('12) 136 → ('13) 182 → ('14) 182 → ('15) 210

##### ② [세수여건] 환율·유가 상승으로 인해 소폭 개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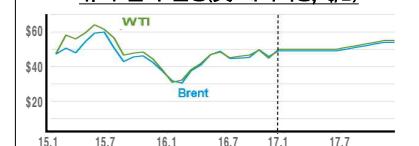
- (환율·유가) 美 금리인상('16.12) 현실화로 인한 환율상승, 减產 합의(OPEC, '16.12)에 따른 유가회복 전망 등 일부 여건은 개선

- (국내 경기) 가계부채 증가, 투자·소비 둔화,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더딘 내수 회복세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환율 변화 추세(Bloomberg,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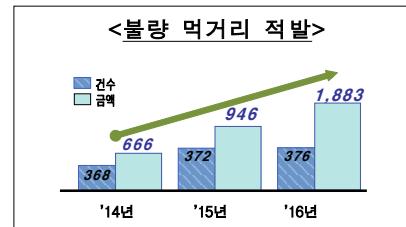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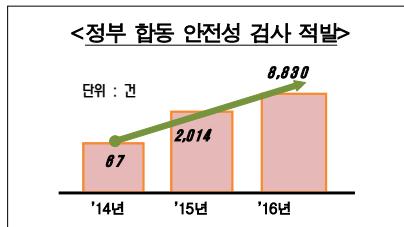


<유가 변화 전망(美 에너지청, \$/B)>



### ③ [불법거래] 무역·외환거래 자유화를 악용한 불법행위 증가 추세

- (무역범죄) 밀수·원산지둔갑·위조상품 등 대외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비정상적 불법·불공정 무역거래행위\* 빈번
  - \* 불법부정거래 단속: 25,385억원('11) ⇨ 25,208억원('13) ⇨ 26,683억원('15) ⇨ 26,812억원('16)
- 통관절차 간소화를 악용한 안전 미인증 생활물품, 불량식·의약품 등의 불법 반입 및 유통으로 소비자·국내산업 피해 확대



- (무역금융범죄) 수출입가격조작\*(Fake Invoicing)을 통한 자금세탁  
· 재산국외도피·역외탈세 등 무역금융범죄 지속 증가\*\*

\* 미국 약 15%, 개도국 약 80%가 무역거래 가격을 조작하여 자금세탁 (GFI 보고서)

\*\* 재산국외도피 적발: 1,157억원('14) ⇨ 1,764억원('15) ⇨ 2,198억원('16)

### ④ [행정변화] 청탁금지법 및 기술혁신 등에 따른 행정전반의 혁신 요구

-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으로 공직사회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한층 더 강도 높은 청렴·투명성 요구

-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 15개 유형으로 구체화, 위반시 형사 처벌
- (금품수수 범위) 직무 관련·대가성 불문, 본인과 배우자로 확대, 100만원으로 강화
- (예외적 허용) 식비(1회 1인당 3만원 이내), 명절선물(5만원 이내), 경조사비(10만원 이내)

- (4차 산업혁명)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AI·IoT·드론 등 신기술을 접목한 행정서비스 요구 증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빅데이터로 재난 예측 강화, (지자체) 빅데이터 활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 2 정책추진 방향

### 주 진 방 향

- 보호무역 강화 등 교역환경 변화에 대처하여 수출 확대를 위한 경제성장 견인에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 집중
- 마약·불량식품·테러물자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수호하고 불법무역·무역금융범죄 근절로 대외경제질서 확립
- 불확실한 세수여건에 대응하여 치밀한 세수 모니터링과 철저한 세원관리로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과 경제성장에 직결되는 수출 증대에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행복·국가발전을 견인

### 중점 추진과제

- 보호무역의 파고에 대응한 수출기업 총력지원
-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관세행정 지원 강화
- 입출국자 1억 명 시대에 대비한 여행자 통관체계 혁신
- 안정적 세수확보를 통한 국가재정 뒷받침
- 마약·불량식품·테러물자 차단으로 국민안전 보호
- 불법무역·무역금융범죄 근절을 통한 대외경제질서 확립
- 우호적 통상환경 조성을 위한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 미래 관세행정 성장 기반 공고화

## IV.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보호무역의 파고에 대응한 수출기업 총력지원
2.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관세행정 지원 강화
3. 입출국자 1억명 시대에 대비한 여행자 통관체계 혁신
4. 안정적 세수확보를 통한 국가재정 뒷받침
5. 마약·불량식품·테러물자 차단으로 국민안전 보호
6. 불법무역·무역금융범죄 근절을 통한 대외경제질서 확립
7. 우호적 통상환경 조성을 위한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8. 미래 관세행정 성장 기반 공고화

1

### 보호무역의 파고에 대응한 수출기업 총력지원

- FTA 활용 극대화로 수출경쟁력 강화
  - 중국과 원산지증명서(C/O) 제출 없이 특혜관세를 향유하는 C/O 전자교환제도\*를 FTA 화물에 시행하고 APTA 화물로 확대
    - \* 对중국 수출 C/O 발급('16.12월): (FTA) 127,877건, (APTA) 45,971건
  - 농수산물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제조 사실만으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한 품목을 집중 발굴하여 FTA 활용촉진
  - 찾아가는 FTA 상담버스 확대 운용(1⇒6대) 및 업종·지역별 FTA 전문교육과정 신설로 영세·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
- 해외 통관장벽 해소를 위한 전략적 세관협력활동 전개
  - 통관애로 빈번국가와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 체결 확대 및 주요 교역국과 정기적 이행점검 회의로 통관장벽 해소
    - \* 베트남, 말레이시아, UAE, 페루, 우루과이, 호주 등 6개국 추진('16년말 기준 14개국)
  - 통관애로해소센터 상설화, 관세·통관 분쟁 발생시 관세관 및 문제해결팀 즉시파견으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신속 해소
- 글로벌 전자상거래 허브 구축으로 新수출동력 창출
  - 전자상거래 글로벌 배송센터의 국내유치 촉진을 위해 '자유 무역지역 간이수출신고 플랫폼' 구축 및 통관절차\* 간소화
    - \* 국내생산 역직구 물품의 반출입 신고 생략, 포장 등 장외작업 절차 간소화
  - 역직구 수출통관인증제 전면 실시, 한·중·일 해상특송체계 확대, C/O 제출없는 FTA 특혜\* 적용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
    - \* 한-중 FTA 협정상 700불 이하 소액품은 C/O 없이 특혜를 제공해야 하나 중정부는 미적용

## 2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관세행정 지원 강화

### □ 통관·물류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지원 강화

- 신고즉시 처리되는 성실기업 대상 '전자통관심사'를 반복거래 등 低위험 수출입물품으로 확대하여 물류비용 절감
- 보세공장 제조·가공용으로 반입되는 원재료에 대한 수입요건 확인 생략 등 규제혁신으로 IT, BT 등 성장산업 지원
- 교역국가별 물동량 가중치를 반영한 한국형 물류비용지수(KCFI) 및 맞춤형 무역통계 개발\*로 기업의 무역전략 수립 지원  
\* MTI 기준 FTA 활용률 월별통계, 중소기업 무역통계, 산업별 무역경쟁력 측정 지수 등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면세점 상생협력모델 정착

- 면세점에 입점하는 중소기업제품, 지역특산품\*이 매출 확대 및 스타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명품 밸류 선순환 구조 창출  
\* 중소기업제품 매장 의무면적 확대: 전체의 20% 이상(대기업면세점), 10% 이상(중소중견)
- 지역상권 상생협력, 관광산업 지원 등 특허공약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으로 면세점의 사회공헌 확대 유도

### □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 사후 추징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정기 세액 정산제」 도입 및 ACVA 신속 심사로 성실납세자 稅부담 완화  
\* 외부전문가(관세사 등) 검증절차를 거쳐 세액을 정산한 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면제 등 혜택 부여
-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 및 「환급 소요량심사 신청제」 도입으로 수출입기업의 유동성 관리 지원
- AEO 상담 전문관 확대 및 관세 컨설팅 강화, 新상품의 품목 분류 사전결정을 통한 기업의 稅부담 예측가능성 제고

## 3 입출국자 1억명 시대에 대비한 여행자 통관체제 혁신

### □ 공항만 신·증설에 따른 원활한 세관 조직·인력 충원

- 여행객과 물동량의 지속 증가로 신·증설되는 공항만의 개장 일정에 맞추어 원활하고 차질없는 세관 운영체계 구축

인천공항('17.10월)	김해공항('17.5월)	인천항('18년初)	제주 강정항('17.7월)
제2터미널(T2) 신축	터미널 추가증설	크루즈 터미널 신축	크루즈 터미널 신설
年 1,800만명 수용	78만명 수용	2선석, 37만톤 처리	2선석, 30만톤 처리

- 세계최고 수준의 여행자 통관지원 및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세관 조직·인력을 적기에 수급

### □ 공항만 만족도 제고를 위한 여행자통관 간소화

- 모바일 기반의 휴대품 전자신고제\*, '통관정보 알리미 앱', 세금납부 안내 해피콜 제공 등 여행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  
\* (1단계) 외국세관 벤치마킹을 통한 인천공항 T2 적용 → (2단계) 전국 공항만 확대
- 외국인 통관도우미(Green Cap) 확대\*, 단체여행자 일괄신고 및 크루즈 여행객의 내국세 환급 간소화로 통관편의 제고  
\* 다문화가정 인력을 공항만에 배치하여 외국인 통관애로 해소: 40명('16) → 52명('17)
- 공항만의 면세품 인도체제 개편(면세점별 분산→통합인도)을 통한 One-Packing 인도로 신속 편리한 쇼핑·출국 환경 제공

### □ 첨단 기술·장비를 활용한 우범여행자 감시체계 고도화

- APIS에 기반한 우범 여행자 타겟팅\*,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 입수 주기 단축(분기↔월별) 및 활용 고도화로 최첨단 위험관리 체계 구축  
\* 과거 적발경력, 승객예약정보(PNR), 구매정보 등을 활용한 우범여행자 사전선별
- 일반 여행객의 불편없이 고위험 여행자만을 감시하는 스마트 CCTV 및 GPS 기반의 여행자·수하물 추적 시스템 구현

## 4

## 안정적 세수확보를 통한 국가재정 뒷받침

### □ '17년 세수목표 : 50조 1,555억 원

- 환율·유가의 변동 등 불확실한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 '17년 소관 세수목표액\*을 차질 없이 징수

\* 관세 9.0조원, 수입부가세 34.2조원, 기타 내국세 7.0조원

- 세수 결정요인과 진도율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치밀한 세원관리를 통해 세입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

### □ 악의적 탈세 및 세원감식 행위에 관세조사 역량 집중

- 「대형 탈세사건 관세조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관세조사 과정에서 외환·범죄조사를 병행하여 악성 탈세행위 엄단
- 특수관계거래 입증책임의 합리적 배분, 이전가격 심사전담팀 확대(7⇒10팀)로 다국적기업의 전략적 조세탈루 차단
- 농수산물 등 저가신고 빈번품목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조작위험 분석 고도화\*로 FTA 부정특혜 차단

\* O/S(Origin Selectivity) 선별기준 확대(59개→116개), 해외공급자 위험도 반영 등

### □ 고질적 체납 해소를 위한 기관간 협업강화 및 제도정비

-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 확대 및 공동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액체납 전담팀을 운영하여 체납정리 실효성 제고
- \* (관세청) 내국세 체납자의 수입물품 압류, (국세청) 관세 체납자의 재산조사·압류
- 체납자 명단공개 확대(3억원→2억원 이상), 출국금지 조치 강화(체납 회피우려 불문)를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세 적극 유도
-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입자 개념으로 개정하여 무분별한 명의대여 방지 및 악의적 범칙체납 발생 차단

## 5

## 마약·불량식품·태러물자 차단으로 국민안전 보호

### □ 마약류 반입차단으로 마약청정국 위상 공고화

- 주요 공항만에 마약 전담팀 운영 및 탐지견 확대(30두→39두) 등 국경 반입단계에서 마약류 차단에 단속 역량 집중

- 「공항만 신종마약 분석센터」 설치, 특송업체 관리감독 강화\*로 해외직구를 악용한 마약 밀반입 근절

\* 특송물품 목록통관 배제기준 마련 및 목록통관시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 식약처 등과 협업검사 확대, 협업검사센터 확충\*, 휴대용 X-ray 검색기 등 과학장비 활용으로 향정신성물질 적발체계 강화
- \* 협업검사센터: 인천세관 → 인천·부산·평택세관 → 전국 주요 공항만세관

### □ 불량식·의약품 근절을 통한 국민불안 해소

- 중점감시 품목(150개) 검사 강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4대 범률\*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 확보로 불량 먹거리 밀반입을 차단
-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약사법

- 먹거리의 원산지표시 위반 근절을 위해 세관의 단속권한을 온라인상의 원산지 허위광고로 확대하고, 시기별 특별단속 실시

- 사료·공업용 수입물품에 대한 추적감시 강화로 식용둔갑 행위를 근절하고, 판매자의 유통이력에 대한 구매자 감시체계 구축

### □ 태러물품·환경파괴물질 차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

- 對태러 유관기관 정보 공유\* 및 분석을 강화하고 현장 기동감시 체계 구축을 통해 총기류, 폭발물 등 태러물품 반입 원천봉쇄
- \* (해수부) 부두 차량출입 실시간 정보 연계 / (경찰청) 총기사건 정보 공유

- 환경파괴물질 및 보호동식물 반출입 차단을 위해 전담 정보 분석팀 신설, 전문가 양성을 통한 단속체계 구축 및 국제수사 확대

## 6 불법무역·무역금융범죄 근절을 통한 대외경제질서 확립

### □ 불법·부정무역 차단으로 건전한 무역 생태계 조성

- 4대 주요 밀수입 분야\*에 대한 특별단속, 밀수조직 프로파일링 및 감시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한탕주의식 조직형 밀수입 근절

\* 고세율 농수산물, 위조상품, 담배, 불량 생활용품 등 밀수입 빈번 품목

-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 後 수출신고제」 및 공항만 적재지 검사체계 구축으로 밀수출 원천 차단

\* (1단계) 중고자동차 ⇒ (2단계) 고액 관세환급 대상 물품, 전략물자 등으로 확대

- 불법 사이트·커뮤니티 등 고위험 사이버 거래공간 위험감지팀 신설과 전담 수사팀 운영으로 불법 사이버 거래행위 척결

### □ 무역금융범죄 근절을 통한 외환거래질서 확립

-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자금세탁 수사권 확보, 무역금융 국제정보센터 신설로 재산국외도피 등 무역기반 금융범죄 엄단

- 무역공급망 内에 거래상대방의 「우범성 금융거래 신고체계」 마련\*으로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예방적 상호견제 기반 구축

\* (단기) AEO 인증 물류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 (장기) 전체 무역공급망으로 확대

- 환전업자 관리 시스템 구축과 수사권 확보를 통한 불법 환전행위 및 무등록 환전업자 단속 강화로 환전질서 확립

### □ 관세국경관리 효율화를 위한 통합위험관리체계 구축

- 관세국경 위험정보 종합분석과 우범물품·여행자 선별 등 위험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센터」 신설

- CIQ기관간 위험정보 공유 및 외국세관과의 자료교환\*을 통한 공조수사로 우범화물 색출 및 국경통제 조치 강화

\* (통관정보) 러시아 등 3개국, (수사정보) 미국 등 73개국, (원산지정보) 중국

## 7 우호적 통상환경 조성을 위한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 □ 국익제고를 위한 실리형 관세외교 확대

- FTA협정 이행, 우범정보 상호교환, WCO 고위직\* 확대 지원 등 협안 해결 중심의 전략적 관세청장회의 개최

\*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 위원회, 정보관리 소위원회 등 의장 2명 선출('16)

- 신흥시장 거점국\* 중심 관세관 파견,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확대 등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국익증진 도모

\*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발생이 많고 교역량 증가하는 中철도, 브라질, 러시아 등

### □ 글로벌 관세역량 강화를 통한 국제 영향력 확대

-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분야별 국제화 전문 인력의 국제무대 진출 적극 지원

\* 어학·업무능력 우수자 Pool 구성 → 국제 인증교관 획득 및 국제회의 참여 → 국제기구 진출

- 세관협력기금(CCF-K)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AEO, 통관창구 단일화(Single-Window) 등 한국형 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 추진

- 개도국 관세행정 능력배양사업을 ADB 등 다자개발은행과 공동추진\*하여 협력체널 확대 및 ODA 공여국으로서 위상 강화

\* 개도국의 WTO 무역원활화협정(TFA) 이행능력배양 사업 공동개최 등

### □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수출로 관세행정 한류 확산

- 개도국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사업과 ODA 지원사업 연계로 UNI-PASS 수출을 촉진하는 Two-Way\* 전략 추진

\* (도입 초기) 기본모듈 무상지원(ODA) + 기술지원(BPR) ⇒ (수출 본격화) 고급모듈 유상수출

- UNI-PASS 수출상단\* 운영, 해외현지 ICT기업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 수출체계 개편을 통한 시스템 수출 가속화

\* 외교부, KOICA 등 정부기관, 민간 전문가, 시스템 개발업체 등으로 공동 수출 플랫폼 구축

## 8 미래 관세행정 성장 기반 공고화

### □ 「2020 관세행정 미래 발전전략」 마련

- 중장기 視界로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과 미래 청사진을 담은 「2020 관세행정 미래 발전전략\*」 수립 및 단계적 추진

\* 주요내용: 서비스 혁신, 불법 근절 등 4대 추진목표, 100大 이행과제로 구성

- 미래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단년도 업무계획 · 성과체계 와의 연계, 예산확보 등 이행 · 점검 · 환류 체계\* 구축

\* 이행체계: 미래전략 실무추진단 신설, 年단위 성과목표 설정 등

### □ 핵심인재 양성 및 업무수요 확대에 따른 조직 확충

- 업무분야별 전문 인재풀 · 경력개발제도 운영 및 국내외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로 관세행정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인재 양성

\* 예산확보(6억원) ⇨ 분야별 인재(5~7급) 선발(청 인사위원회) ⇨ 전문가 육성(매년 20명)

- 공항만 신설, 수출입기업 지원 요구, 국경관리기능 강화 요청 등 행정수요 변화에 적기 대응하여 선제적 조직 · 인력 확충\*

\* 통합위험관리센터·정보개발과 신설, 수출입기업지원센터(1)·품목분류과(1) 추가 신설 등

### □ 공직기강 확립 및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구현

- 「5대 주요비위\* Zero化 운동」 전개, 부조리 · 비위 행위에 대한 無관용 원칙 적용을 통해 부조리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

\*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직무태만, 재산등록의무 위반

- 2020 조직문화 마스터 플랜\*(GWP\*)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추진으로 창의 · 소통 기반의 열정적 조직문화 정립

\* Great Work Place 운동 : 4대 분야(Pride, Process, Professionalism, Place) 집중 개선

- Fast Track 승진 시스템 강화 등 높은 성과를 낸 조직과 개인에게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이 돌아가는 합리적 성과주의 문화 조성

## 참 고

## 2020 관세행정 미래 발전전략 개요

### 비전

### 국민을 위한 WORLD BEST 관세청

### 미션

###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경제국경 관리감독

### 미래 모습

수출입 증추기관	국가재정 조달기관	경제국경 감독기관	국제경제 경찰기관	국민안전 보호기관	대외정보 총괄기관	글로벌 선도기관
-------------	--------------	--------------	--------------	--------------	--------------	-------------

### 전략 목표

Customer Service	Control of the Risk	Cooperation with Partners	Core Infra
------------------	---------------------	---------------------------	------------

### 추진 전략

효율화	정예화	과학화	투명화	글로벌화
-----	-----	-----	-----	------

### 10<sup>+1</sup> 발전 방향 및 100대 핵심 과제

1. 관세행정 기본기능 회복	① 수출입 통관체계 혁신 ② 공항만 및 화물감시체계 개편 ③ 품목분류 · 가격평가 고도화
2. 블루오션 업무 육성	① FTA 활용지원 및 견증 강화 ② 원산지 표시단속 발전 ③ 무역통계 고도화 ④ 무역장벽 해소 ⑤ 마약수사 확대
3. 새로운 업무영역 확장	① 유통단계 심사 ② 재정 기여도 제고 ③ 국제 금융수사 ④ 세관 사법경찰권 단계적 확대 ⑤ 對테러 · 환경보호
4. 위험관리 고도화	① 통합위험관리센터 신설 ② 분야별 위험관리 고도화 ③ 공급망 위험관리 ④ AEO관리 내실화 ⑤ 파트너쉽 강화
5. 국경관리 협업 확대	① 국경관리기관 협업기반 조성 ② NTC 신설 ③ 국경관리 정보 통합활용 ④ 국경관리기관 통합 대비
6. 사이버 시대 대응 강화	① 사이버 불법대응 강화 ② 전자상거래 무역지원과 관리
7. 첨단 기술 · 장비 접목	① 통관 화물관리 자동화 · 자동화 ② 국경감시 및 조사단속첨단화 · 과학화 ③ 분석실 현대화, Big Data 활용 확대
8.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① 전략적 핵심인재 양성 ② 인력 배치 및 활용 고도화 ③ 공정한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9. 글로벌 역량 강화	① 관세행정 국제표준 선도 ② UNI-PASS 수출 확대 ③ 글로벌 인재 전략적 육성 ④ 국제기구 진출과 영향력 확대
10. 건강한 생태계 조성	① 대내외 지지기반 확충 ② 공정 · 투명한 환경조성 ③ 유관기관 역할 재정립 및 전문성 강화

### 추진 기반

인력·조직·예산 (선진국 벤치마킹)	CPM 성과관리 (미래대비 반영)	미래전략 추진위 (이행관리 보완)
------------------------	-----------------------	-----------------------

+ 통일시대 준비